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중일경쟁과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안보정책 변화*

이승희·김지영

1. 들어가며

동남아시아는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으로 일본외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특히 지정학적 측면에서 동남아시아는 인도 태평양의 중심이자 태평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접점인 동시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공세적 해상진출로 인해 영해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일본

이승희(李昇熹) 한양대학교(에리카캠퍼스) 일본언어·문화학과 박사과정. 도쿄대학 법학정치학 연구과 석사 학위 취득. 석사 논문은 「문화대혁명 종료 이후 보수적 지도자의 개혁·개방에 대한 견해에 관하여」이다. 최근 연구로는 이승희·김지영, 「국가 정체성 갈등이 경제 제재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중심으로」(2021)가 있다.

김지영(金志英) 한양대학교(에리카캠퍼스) 일본학과 부교수. University of Delaware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 미국사회과학협회/일본학술진흥회(JSPS) 박사후 연구원으로 도쿄대학 대학원정보학환에서 근무. 이후 도쿄대학 총합문화연구과 준교수 역임. 최근 연구로는 Ji Young Kim, Wenxin Li, & Seunghee Lee, "Making Sense of Japan's Export Restrictions against South Korea, Domestic Symbolism, Empowered Premiership and Anti-Korean Sentiment," *Asian Survey* 61(4), 2021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 사업으로 연구됨(HY-202100000001664).

https://doi.org/10.29154/ILBI.2022.27.330

은 전후 동남아시아에 대해 전후 보상 차원의 ODA 외교를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에 주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중국의 부상과 역내 공세적 정책은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외교에 전환을 가져왔다. 즉, 2010년 중일 GDP 역전, 센카쿠에서의 일본 순시선 중국어선 충돌, 2012년 센카쿠 국유화로 인한 중국에서의 반일 운동 등의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일본은 중국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뿐 아니라 안보협력을 확대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안보협력을 위한 법제적 기초 작업은 2010년 이후 민주당 정권에서부터 이루어졌지만, 2013년 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었다. 즉, 2차 아베 내각은 입각 직후인 2013년 12월 공포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의거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대외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일본의 새로운 동남아시아 협력 외교의 큰 축이 된 안보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본고는 고조되는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갔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이 본격화된 2010년 전후, 동남아시아 국가는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협력 파트너로서 일본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일본은 안보협력을 위한 파병이나 방위 물품 수출 등에 대한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이들 국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우회 지원과 법제 개정이라는 방법을 통해 동남아 국가와의 방위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은 일본이 비군사주의 규범[1]으로

1 1954년 자위대 설치 이후, 헌법상의 전력 보유 금지조항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자위대 간의 법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자위대 체제하에서의 군사력 건설을 다각도로 제약하는 규범들을 선언하거나 관례화하였다. 전수방위의 원칙, "기반적 방위력"의 개념,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원칙, 무기수출 3원칙, 비핵 3원칙, 공격용 무기 비보유의 원칙, 방위비 GNP 1% 이내 원칙,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 공중급유 금지의 방침 등이 1950년대 중반 이후 관례화된 규범들인데, 이와 같은 규범들을 '비군사주의'(de-militarization) 규범이라 한다. 박영준, 「군사력 관련 규범의 변화

부터 이탈하고 있다고 분석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본이 대동남아시아 안보협력의 강화 과정에서 비군사주의 규범을 탈피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여전히 비군사주의적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2]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분석은 향후 일본의 대외전략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관한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일본은 동남아시아 국가와 방위협력을 전개함에 있어서 중국 견제를 위한 적극적인 군사협력보다는 '소다자주의', '비군사주의' 전통에 근거한 접근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일본의 동남아 국가와의 안보협력 강화는 국가전략 변화에 기인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중국의 부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해양 안보와 경제 안보에 중요한 동·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 및 현상 변경 시도가 일본의 인도 태평양을 중시하는 대외전략을 견인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으로부터의 해양 안보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에 관한 연구는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안보협력을 논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즉,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후 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쿼드(QUAD) 등의 대외전략 수립을 통해 중국이라는 외부적 위협에 미국과 함께 대응하고자 하였다.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공유하고 있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에 관한 논의 역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에서의 일·동남

와 일본 안보정책 전망: "기반적 방위력"개념,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 및 "무기수출 3원칙"개정을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통권 14호, 2012, 5~6쪽 인용.

2 버거는 일본의 비군사주의적 전통에 대해서 전전 군국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어, 정치 제도화를 거쳐 다수가 공유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비군사주의적인 문화와 전통에 관해서는 버거(Thomas U. Berger)의 1993년 논문 "From Sword to Chrysanthemum: Japan's Culture of Anti-militarism," *International Security* 17(4), 1993 참고.

아시아 안보협력 연구는 개별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가 아닌 미일동맹강화, 미중경쟁, 또는 FOIP 연구가 중심을 이루는 경향을 보인다.[3]

일본의 대동남아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는 전후 일본의 ODA 외교의 주요 대상자로서의 동남아시아 연구[4]와 일본의 종합적인 대외전략(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 중국과의 경쟁 구도하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다루는 연구[5]가 중심을 이루어 왔다. 그 밖에는 일본과 개별 동남아시아와의 관계를 안보적 관점에서 다룬 사례 연구[6]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가 공고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중국 견제라는 대외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는 안보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일본과 동남아시아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며 그 성격은 어떠한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본과 동남아 국가 간의 전략적 관계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교 관계사적 입장에서 접근한 선행연구와 외교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한 선행연구 모두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일본과 동남아시아 협력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분야가 ODA 외교를 필두로 한 경제협력이었던 만큼,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외교를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분석한 선행연구는 중요하다.

3 吉岡桂子, 「米中対立が揺らすASEANの「天秤」: アジアは今, 何を考えているのか」, 『外交』 59(3), 2020, 102~108쪽; 木場紗綾, 「米中の間で揺れる東南アジアの外交と日本の関与」, 『社会科学』 48(4), 2019, 25~50쪽; 神保謙, 「「インド太平洋」構想の射程と課題」, 『国際安全保障』 46(3), 2018, 1~11쪽.

4 허원영, 「전후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경제협력과 문화외교: '경제지배' 이미지의 대응 수단으로서의 소프트 파워」, 『日本學(일본학)』 통권 54권, 2021, 297~321쪽.; 이지영, 「일본의 대ASEAN 전략의 변화」, 『21세기정치학회보』 28권 4호, 2018, 125~146쪽.

5 서승원, 「한국과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안보정책: 신남방정책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 그리고 역외 중간국의 전략적 영향력」, 『비교일본학』 48집, 2020, 57~80쪽; 김석수,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남아시아의 역할」, 『동북아연구』 제34권 제1호(통권 48호), 2019, 127~152쪽; 이기태, 「협력과 충돌의 대외전략: 일본의 아시아 외교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44권, 2016, 135~160쪽; Elina Sinkkonen, "The More the Merrier? Sino-Japanese Security Relations in the Context of Complex Interstate Rivalry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Pacific Review* 32(5), 2019, pp. 748~777; 神谷万丈, 「「競争戦略」のための「協力戦略」: 日本の「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戦略(構想)の複合的構造」, 『安全保障研究』 第1巻 2号, 2019, 47~64쪽; 林賢參, 「安倍政権の東南アジア外交とインド太平洋戦略(特集 日本の政治経済情勢)」, 『問題と研究』 47(2), 2018, 97~140쪽; 齋藤康平, 「中国の海洋進出と我が国の対応について」, 『アジア研究』 60巻 4号, 2015, 35~39쪽.

6 이기태, 「일본의 대베트남 안보협력:소프트 안보협력」, 『일본학보』 122호, 2020, 265~283쪽.

대표적인 연구로 허원영의 연구와 이지영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의 연구는 일본의 전후 배상 외교의 대상이자 ODA 수원국(受援國)이었던 동남아시아 국가가 경제발전과 전략적 지위 상승으로 인해 일본에 있어 한층 주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7]

한편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ODA 정책의 '안보화'의 역사적 경위와 원인에 대한 논의도 주목할 만하다. 야마모토는 일본의 ODA가 안보 목적으로 활용된 것은 일본의 자민당이 정무조사회를 통해 ODA 공여 의사결정을 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이며, 이는 수원국의 경제발전만을 위한 ODA 사용의 결정적인 전환을 의미한다고 한다. 또한 ODA 사용이 중국 견제와 연관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부터이며, 2006년 비전통 안보 분야(해적 및 테러 퇴치)에서 일본의 ODA 공여는 중국의 공세적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역내 국가의 능력 구축 기제의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이후 일본은 2010년 중국과의 센카쿠 영토 분쟁이 격화된 이후, 중국 견제를 위해 ODA를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연관시키는 것을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8] 특히, 아베 정권 시기 새로운 ODA 전략에 있어 법치와 자유주의, 인권,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강조한 것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9]

일본에 있어 동남아시아 국가의 전략적 가치 변화를 논하는 데 있어서, 역내(域內) 중일 경쟁 구도라는 관점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배기현의 연구에서 보듯, 일본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대외 정책 변화를 만들어 내기도 했으며,[10] 이진영과 김태균이 밝혔듯 중일의 공적

7 허원영, 「전후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경제협력과 문화외교: '경제지배' 이미지의 대응 수단으로서의 소프트 파워」, 297~321쪽; 이지영, 「일본의 대ASEAN 전략의 변화」, 125~146쪽.

8 Raymond Yamamoto, "The Securitization of Japan's ODA: New Strategies in Changing Regional and Domestic Contexts," in Marie Söderberg & André Asplund, eds., *Japanese Development Cooperation: The Making of an Aid Architecture Pivoting to Asi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6, p. 77.

9 Raymond Yamamoto, "The Trajectory of ODA's Strategic Use and Reforms: From Nakasone Yasuhiro to Abe Shinzō,"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74(6), 2020, pp. 633~648.

10 배기현, 「일본과 중국의 대(對) 동남아시아 협력: 경쟁과 수렴」, 『신아세아』 제24권 제2호(통권 91호), 2017, 150~174쪽.

개발원조 경쟁이 베트남과 미얀마에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11] 지역에서의 중일 경쟁이 동남아시아 국가의 전략적 가치 상승을 유도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에 있어서 변화된 대동남아 전략의 요체는 무엇인가? 서승원에 따르면, 아베 내각에서 내건 대동남아 정책의 목표는 대중 견제라는 동기하에 배타적인 해양 지정학적 방어선 구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의 다자주의적 규범·법치를 강조하면서 자국의 구상에 맞추어 이들 국가를 선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면서 동남아 국가와의 안보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며, 동남아시아 국가의 해상보안 능력 및 국방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12] 이기태 역시 '대중국 포위망 강화'를 위해 아베 정권이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적 대외전략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아베 정권의 동남아시아 중시 외교는 전통적인 안보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분야의 안보협력 강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13]

중국에 대한 견제와 경쟁을 강조하는 연구가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연구의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김석수의 연구는 일본의 FOIPs가 중국 견제를 위한 변화된 대외전략이라는 기존의 관점을 비판한다. 즉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추구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다자적인 세력균형이지 중국 배제는 아니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14] 그는 일본에 의한 국제규범과 룰의 강조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이 아니라 중국을 규칙과 제도의 망에 끌어들이려는 일본의 노력이라고 보고 있다.

가미야 또한 김석수의 관점을 공유한다. 그는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

11 이진영·김태균, 「동남아시아 체제전환국가의 대외원조 활용 전략 비교연구: 베트남과 미얀마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8권 4호, 2019, 101~130쪽.

12 서승원, 「한국과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안보정책: 신남방정책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 그리고 역외 중간국의 전략적 영향력」, 57~80쪽.

13 이기태, 「협력과 충돌의 대외전략: 일본의 아시아 외교를 중심으로」, 135~160쪽.

14 김석수,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남아시아의 역할」, 127~152쪽.

도 태평양 전략(구상)'은 중국과의 경쟁적 측면과 중국을 포섭하고자 하는 협력적 측면이 공존하는 복합적 구조를 띠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일 경쟁의 격화는 지역의 중요한 전략 파트너이자 중국과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 인도, 호주 등에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적 대중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5]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과 동남아 국가에 관한 선행연구는, ODA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협력 관계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일본의 전략적 의도와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는 일본과 동남아시아가 경제협력 파트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안보협력 파트너로 변모하였음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과의 방위협력을 분석한 이기태의 연구를 제외하고,[16]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안보협력이 어떠한 경위를 거쳐 어느 정도까지 진척을 이루었는지 고찰한 논문은 없다. 그런 점에서 'FOIP' 이후 일본과 베트남의 안보협력을 소프트 안보협력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는 이기태의 논문은 동남아시아 국가와 일본과의 안보협력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요컨대 기존의 연구들은 부상하는 중국으로 인해 동남아시아 국가의 지경학적, 지정학적 가치가 변동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일본이 어떻게 이 새로운 전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넘어선 안보협력 관계 구축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다.

본 연구는 일본의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된 2010년을 기점으로,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안보협력의 특성과 현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안보협력 접근을 제도 변경, 비전통 안보 분야

15 神谷万丈, 「「競争戦略」のための「協力戦略」: 日本の「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戦略(構想)の複合的構造」, 10쪽. http://www.kiip.or.jp/taskforce/doc/anzen20190215_Kamiya%20Matake.pdf(최종검색일: 2022. 7. 11.).

16 이기태, 「일본의 대베트남 안보협력: 소프트 안보협력」, 265~283쪽.

에서의 협력, 다자 및 양자 군사 훈련의 강화로 분류하고 이들의 성격과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안보 정책에는 비군사주의 규범으로부터의 탈피와 비군사주의적 전통 유지라는 중층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중층성은 일본의 향후 대동남아시아 전략이 군사주의적 대립이 아닌, 다자주의를 통한 우회적이고 비군사주의적인 방식으로 지속될 것임을 전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3. 안보법제 및 제도 변경과 전통안보분야 협력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제도 변경이다. 왜냐하면, 전후 일본은 법제적 제약으로 인해 동남아 국가를 비롯한 우방국가와의 방위협력에 실질적인 제약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를 상징하는 비군사주의 규범은 구체적으로 '비핵 3원칙',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 '무기수출금지 3원칙', '전수방위의 원칙', '기반적 방위력' 개념, '방위비 GNP 1% 이내의 원칙', '공격용 무기 비보유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일본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상황에 놓인 국가—베트남과 필리핀—의 ODA를 통한 해안 순시선 지원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군사주의 규범들은 2000년대 이후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특히 제3국가에 대한 무기 이전 및 자위대 파견 등은 일본의 비군사주의 원칙의 포기 또는 보통국가화로 해석되기도 하였다.[17] 일본의 무기수출 원칙의 변화는 미국의 요구로 1980년 이후 서서히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중국의 위협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정치권

17 박영준, 「일본 방위산업 성장과 비군사화 규범들의 변화: '무기수출금지 3원칙'의 형성과 폐지 과정을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통권 18호, 2014, 43~76쪽.

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2010년 센카쿠열도에서의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 충돌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 중국위협론이 현저히 대두됨에 따라, 2011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은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을 형해화시켰다. 또한 아베 내각에 이르러서는 무기수출 3원칙이 방위장비이전 3원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방위물품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ODA 관련 법안이 개정됨으로써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방위 물품 이전과 안보협력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ODA를 통한 순시선 공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안보협력 강화는 전후 안보정책의 기틀이 된 비군사적주의적 안보정책에서 일본이 탈피하려는 경향을 보여 주는 중요한 일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1) 방위장비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 제정

일본은 1967년 선언된 무기수출 3원칙에 의해 무기, 무기 제조 기술, 무기로 제조될 수 있는 물품 수출을 실질적으로 금지하여 왔다.[18] 법률적인 '금지'를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총리 이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총리, 다나카 로쿠스케(田中六助) 통상장관 등이 실질적이고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금지'임을 재차 확인해 줌으로써, 2011년 무기수출 3원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관련 원칙은 준수되었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의 기술공여는, 1983년 고토다 마사하루(後藤田正晴) 관방장관의 담화를 계기로 무기수출 3원칙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1981년 미국이 상호방위원조 협정에 의한 유상원조 계약과 기술 교환약정을 근거로 미일 양국 간 무기 기술의 상호교류를 요구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었다.

미국과의 방위협력을 위한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 조처는 2004년도에 한 차례 더 진행되어,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탄도미사일 방위시스템 안건

18 공산권, UN 결의에 의한 무기 금수조치가 취해진 국가, 분쟁지역으로의 무기수출 금지.

을 무기수출 3원칙에 의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BMD 이외에 미국과의 공동개발·생산안건과 테러·해적 대책지원의 안건을 개별 검토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19] 관방장관 담화 이후, 일본은 미국과 그 이외의 국가로 나누어 사안별로 무기수출 관련 예외 조치를 적용하게 되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사토 내각과 미키 내각에서 확립되었던 일본 정부의 무기수출 방침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무기수출 3원칙의 형해화는 노다 내각에서 무기수출 3원칙 운용개정으로 가속화되었다. 2011년의 "방위장비 등의 해외 이전에 관한 기준에 대한 내각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일본은 무기 기술 공여나 무기의 공동개발·생산을 사안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제시함으로써,[20] 방위 장비품의 해외 이전에 관한 기준을 포괄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무기수출 3원칙 운용개정은 다시 2014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으로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으로 인해 일본의 방위 관련 장비 및 물품 이전의 제약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 특히 1) 평화 공헌 및 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에 기여할 경우, 2) 일본인의 안전보장에 기여할 경우 및 목적 외 상용, 3) 제3국으로의 이전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이전을 허용한다는 방침은 실질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 대한 방위장비물품의 이전을 가능하게 했다.[21] 예를 들어, 2014년 호주와 방위 장비품·기술 이전 협정이 최초로 체결된 이후, 일본 정부는 프랑스, 인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도 동 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라오스와 미얀마와는 방위 장비품·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하기 전 단계인 방위협력 교류에 관한 각서가 체결되었다.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방위 물품 지원 협력의 대표적인

19 김진기, 「일본의 무기수출정책 변화: 전개과정, 배경, 의도」, 『국가전략』 20권 3호(통권 69호), 2014, 107~134쪽.

20 首相官邸, 「「防衛装備品等の海外移転に関する基準」についての内閣官房長官談話」, http://www.kantei.go.jp/jp/tyokan/noda/20111227DANWA.pdf(최종 검색일: 2022. 4. 25.).

21 김진기, 「일본의 무기수출정책 변화: 전개과정, 배경, 의도」, 113~114쪽.

〈표 1〉 일본의 무기수출 관련 법제의 변경

연도	내각	개요
1967	사토 내각	무기수출 3원칙 표명
1976	미키 내각	무기, 무기용 부품과 구성품 및 무기 기술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며, 3원칙 대상 지역 외에도 무기수출을 삼가한다고 표명
2004	고이즈미 내각	미사일 방위 시스템 안건 및 무기 공동 연구 개발 안건 등에 대한 무기수출 3원칙 예외 인정
2011	노다 내각	"방위장비 등의 해외 이전에 관한 기준"에 대한 내각 관방장관 담화: 방위 장비품 해외 이전에 대한 기준 포괄적 완화
2014	아베 내각	방위장비이전 3원칙으로 개정: 무기 금지 3원칙의 철폐
2016	아베 내각	방위장비이전 운용 지침 공포

출처: 김진기 논문 〈표 1〉(115쪽) 발췌, 정리.

사례는 필리핀이다. 2014년 일본 필리핀 정상회담을 통해 이전이 결정된 TC-90은 방위장비운용 지침의 개정으로 2016년 필리핀 정부에 유상 대여하게 되었다.[22] 해상자위대 불용기인 TC-90의 유상 대여와 장비 및 기술정보 이전은 2016년 방위장비 3원칙 및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영지침이 개정된 이후인 2017년에 실행되었다.[23] 해당 물품 이전을 위해서는 운용 지침이 정한 심의 기준에 부합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가장 중시되고 있는 기준은 평화공헌·국제협력의 관점과 일본의 안전보장 관점에서 긍정적인 의의가 있는지 여부였다.[24] 이에 방위 물품 이전의 심의 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필리핀 해군의 TC-90 운용의 목적이 인도적 지원·재해 구호, 수송 및 해양 상황 파악과 관련된 임무 수행을 위해서이며, 이는 방위장비이전

22 外務省, 「TC－90等のフィリピンへの移転」, https://www.mofa.go.jp/mofaj/s_sa/sea2/ph/page3_001796.html(최종 검색일: 2022. 4. 25.).

23 防衛省, 『防衛白書2021』, 420쪽, https://www.mod.go.jp/j/publication/wp/wp2021/pdf/R03040205.pdf(최종 검색일: 2022. 4. 25.).

24 防衛装備庁, 「防衛装備移転三原則の運用指針」, 2022, 1~2쪽, https://www.mod.go.jp/atla/soubiseisaku/soubiseisakugijutu/itenshishin_r040308.pdf(최종 검색일: 2022. 4. 25.).

〈표 2〉 방위 장비품 및 기술 이전에 관한 협정 체결 현황

2016년 4월	필리핀	'방위 장비품 및 기술 이전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 협정' 발효
2018년 4월	말레이시아	'방위 장비품 및 기술 이전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 협정' 발효
2021년 3월	인도네시아	'방위 장비품 및 기술 이전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 협정' 발효
2021년 9월	베트남	'방위 장비품 및 기술 이전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 협정' 서명
2022년 5월	태국	'방위 장비품 및 기술 이전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 협정' 서명

출처: 방위백서 및 외무성 공식 자료를 참고로 필자 정리

防衛省, 『防衛白書2021 資料編』, 資料29, 74쪽, https://www.mod.go.jp/j/publication/wp/wp2021/pdf/R03shiryo.pdf(최종 검색일: 2022. 7. 18.).
外務省, 「日·ベトナム防衛装備品·技術移転協定の署名」, 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3_000584.html(최종 검색일: 2022. 7. 18.).
外務省, 「日·タイ共同記者発表」, https://www.mofa.go.jp/mofaj/s_sa/sea1/th/page3_003296.html(최종 검색일: 2022. 7. 18.).

원칙에 부합한다고 평가하였다.[25]

이에 필리핀과는 방위 물품 이전에 대한 양국의 각서가 조기에 체결됨에 따라, 총 세 건의 방위 물품 이전 계약이 성립되었다. 방위 물품 이전에 있어서 조종사 훈련이라든지, 정비 지원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지원 역시 이루어졌다. 특히, 2020년 8월 계약의 경우 2014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으로 개정된 후 처음으로 완성 장비품이 해외에 이전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태국으로의 경계관제 레이더 이전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이전을 위한 심의가 2018년 3월에 이루어졌으며, 일본 정부가 공개 입찰 방식의 방위 물품 이전을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태국 공군의 경계관제 레이더 정비 계획에 맞춰 국제 경쟁 입찰이 실시되었고, 이에 일본 방산 기

25 経済産業省, 「防衛装備の海外移転の許可の状況に関する年次報告書」, 17~18쪽, https://www.meti.go.jp/policy/anpo/set_annualreport_220408.pdf(최종 검색일: 2022. 4. 25.).

업인 미쓰비시가 참가함에 따라, 레이더 이전과 그에 부속된 부품 기술 이전에 관한 심의를 하게 된 것이었다.[26] 실제로 미쓰비시의 입찰이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방위 물품 이전에 대한 제약이 풀리면서 일본 정부에 의한 동남아시아에 대한 방위 물품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베트남과 방위 장비품 및 기술 이전에 관한 협상을 2016년에 시작했으나, 2021년에 되어서야 협정을 체결하였고, 말레이시아와는 2018년, 인도네시아와는 2021년 3월에 관련 조약을 체결하였다. 태국은 2017년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인정한 이후, 2022년 5월 일본과의 방위장비 및 기술 이전을 위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즉, 일본 방위성은 2014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개정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와 적극적으로 방위 장비품 및 기술 이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방위협력을 공고히 하였다.

2) ODA 관련 법제의 재편과 ODA를 통한 방위협력의 강화

2015년 2월 아베 내각은 기존의 정부개발원조대강(2013년 8월 각의 결정. 이후 ODA 대강으로 약칭)의 명칭을 개발협력대강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내용의 일부를 개정했다. 개발협력대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한 이유에 대해 아베 내각은 구 ODA 대강에 포함될 수 없었던 국가 등, 대상 범위와 협력 방법 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개정된 개발협력대강에 ODA를 국가안전보장 전략의 일환이자 일본 부흥전략의 일환으로 적극적이며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임을 명기하고 있다.[27]

본래 일본의 ODA 정책은 군사적 목적의 자금 공여 및 물자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는데, 2014년 개발협력대강 개정 이후 군사적으로도 ODA가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즉 개발협력대강에 "민생

26 経済産業省,「防衛装備の海外移転の許可の状況に関する年次報告書」, 21쪽.

27 衆議院,「衆議院議員井坂信彦君提出開発協力大綱に関する質問に対する答弁書」,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b189093.htm(최종 검색일: 2022. 4. 25.).

목적, 재난구조 등 비군사적 목적의 개발협력에 상대국의 군 혹은 군적을 보유한 자가 관계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의의에 주목해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한다."라는 새로운 조건을 추가해 ODA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28] 이는 ODA 정책을 통해 실현하려는 일본의 국익의 개념이 '경제적 실익'에서 '안전보장'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방위 물품 지원의 수혜 국가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이었는데, 이들 국가 모두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다. 베트남의 경우 일본은 2012년 4월 ODA 방식으로 경비정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개발협력대강'의 각의 결정 전에는, 일본의 ODA 방침상 ODA 자금으로 외국 군대에 무상으로 장비 지원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3년 5월 ODA를 통해 베트남에 경비함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베트남 해양 경찰을 군조직에서 분리하는 군조직 개편을 요구하였다.[29] 즉, 일본 정부는 제도적 제약을 피해 ODA 자금으로 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해, 수원국의 행정조직 변경까지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2015년의 정부개발원조대강의 개정으로 이러한 법적 제약이 실질적으로 철폐되었다. 이에 일본은 2013년 ODA를 통해 베트남에 1척의 순시선을 제공한 데 이어, 2015년 중고 순시선 6척을 베트남에 무상제공했다. 이후 2017년 1월 베트남을 방문한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해양 분야를 중심으로 안보와 방위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순시선 6척의 건조비를 포함한 엔차관 공여를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순시선 공여는 총 13척이 되었다.

말레이시아에 대한 방위 물품 지원은 2016년 11월, 일본이 말레이시아에 순시선 등을 공여하는 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 각서에서 일본 정부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ODA 자금으로 해상보안청 소속의 2척의 순시선을 공여하기로 하였다. 이는 같은 해 3월 중국 해경국 대형 순시선과

28 강우철, 「일본 ODA의 국제규범 준수와 공여국 중심주의: 개발협력대강을 중심으로」, 『한림일본학』 30권, 2017, 172~196쪽.

29 「越, 沿岸警備隊に格上げ改編 日本の巡視船供与に道」, 『中日新聞』, 2013年 8月 28日.

함께 중국어선 100척이 말레이시아 EEZ에 침범했으나, 말레이시아 소형정이 중국 대형 순시선에 의해 퇴각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일본에 대형 순시선 공여를 요청했으며, 11월 각서를 체결함으로써 ODA를 통한 순시선 공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한편, 필리핀에 대해서는 ODA를 통해 순시선 공여와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즉, 2013년 3월 필리핀 해안경비대 해상안보 능력 향상을 위한 '해안경비통신 시스템' 구축을, 2014년에는 '연안 경비대 해상능력 향상 계획'(Maritime Safety Capability Improvement Project for the Philippine Coast Guard (PhaseII))의 일환으로 연안 경비대가 사용할 선박 2척 건조를 지원하였다.

4.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전술한 법제 변경은 일본이 전후 고수해 온 '비군사주의 규범'에서의 이탈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비군사주의 규범의 원칙을 지탱하고 있던 법제 개정을 통해 중국과의 영해 분쟁을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방위 물품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군사협력에 기반한 안보협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동남아시아 중심주의에 입각한 비전통 분야에서의 안보협력이나 해상보안청을 통한 해상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는 동시에 비군사주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모습 또한 보여 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비엔티안 비전과 방위성의 능력구축사업, 해상보안청을 통한 해상안보 지원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1) 비엔티안 비전(Vientiane Vision)

2016년에 발표된 '비엔티안 비전'과 2020년에 발표된 '비엔티안 비전 2.0'은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안보협력 강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비엔티안 비전은 일본의 대동남아

시아 안보 정책의 방향성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방위협력 이니셔티브인 '비엔티안 비전' 공표의 배경에는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에 대한 필리핀의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국제중재재판소에서의 중국 패소 판결, 중국의 불복 선언이라는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남중국해 등지에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공섬 건설에 대해 일본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추구'로 받아들였으며, 해당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역외국가인 일본은 '법에 의한 지배'를 통한 국제 질서 유지라는 FOIP의 기본 원칙하에서 중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를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의 비엔티안 비전에서 동남아시아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 특히 (1) 법치주의 강화, (2) 자연재해와 비전통적 위협과 같은 역내 문제에 대한 동남아시아의 자율적인 대응 지원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본이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30] 즉, 비엔티안 비전은, 현상 변경자인 중국에 대한 견제 목적을 가진 동시에 동남아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관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일본의 비군사주의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발표된 비엔티안 비전 2.0은 비엔티안 비전을 발전시킨 것으로, 그 목표와 로드맵이 비엔티안 비전에 비해 좀 더 구체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31] 즉, 방위 물품 이전 및 개발 협력 등을 언급하고 있는 한편, 전반적으로는 인적 교류와 개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연합훈련 실시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엔티안 비전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비엔티안 비전과 비엔티안 비전 2.0 모두 동남아시아 방위 역량 강화와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방위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두 개

30 防衛省, 『防衛白書 2019』 資料 50, https://www.mod.go.jp/j/publication/wp/wp2019/html/ns050000.html(최종 검색일: 2022. 4. 25.).

31 防衛省, 『防衛白書 2021』 資料 45, https://www.mod.go.jp/j/publication/wp/wp2021/html/ns045000.html(최종 검색일: 2022. 4. 25.).

의 비엔티안 비전에서 일본은 방위장비 지원과 같은 하드웨어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개발과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통해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방위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두 개의 비엔티안 비전을 통해 (1) 법의 지배, (2) 해양 안보 강화, (3) 재해나 비전통적 위협 등에 대한 대응력 분야에서 ASEAN 전체의 능력 구축에 기여함과 동시에 ASEAN의 중심성과 일체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동남아시아 국가와 방위협력을 이루어 나갈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2) 능력구축지원사업

능력구축사업 역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강조한 방위협력 지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비군사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능력구축지원사업은 2010년 민주당 정권에서 책정된 방위계획대강에 처음으로 포함되었으며, 이후 아베 정부가 계승하여 2013년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기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 사업을 중요한 방위협력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안전보장 관련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다국간 및 다층적 안보협력을 확보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32]

지원 내용은 전투행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초기, 도로공사와 차량 정비와 같은 비군사적 지원 사업이 중심이었으나, 2013년 11월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이후 군사 조직 입장에서의 비행안전과 국제항공법에 관한 세미나를 베트남, 필리핀 등의 국가와 빈번하게 개최하고 있다.[33] 방위성은 능력구축지원의 목적이 (1) 지원대상 국가가 스스로 국제안전보장 환경의 안정화 개선에 공헌할 수 있게 할 것, (2) 지원대상국과의 관계 강화, (3) 미국, 호주 등의 능력구축사업을 지원하는 국가와의 관계 강화, (4) 국

32 이기태,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능력구축지원과 해양 안보」, 『E-JOURNAL』 제10호, 2016. 4. http://komsf.or.kr/bbs/board.php?bo_table=m43&wr_id=30(최종 검색일: 2022. 4. 25.).

33 이기태, 「일본의 대베트남 안보협력: 소프트 안보협력」, 279쪽.

제사회에서 일본의 신뢰성 향상이라고 밝히고 있다.[34]

즉 능력구축사업의 직접적 목적이 중국 견제라고 밝히고 있지 않으나, 사업의 지원 빈도가 중국과 대립하는 국가에서 높다는 점, 또 이들 국가와의 국제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일본이 이 사업을 통해 중국을 우회적으로 견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지원 방식이 상대국의 요구에 따른 자위대의 개별 사안별 지원을 명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유연하고 탄력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능력구축지원사업에 의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시작은 2012년 8월 비전투 분야의 기술지원이었다. '능력구축지원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에 지뢰 제거와 의료 등의 비전투 분야에서 기술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능력구축사업 시행 당시인 2012년에는 군사 분야에서의 지원을 금지한 ODA법의 제약으로 인해 사업 예산은 방위비 예산으로 지출되었다. 그러나 2015년 '개발협력대강'이 각의 결정되면서 ODA를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능력구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방위장비 및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정부는 2014년 이후 능력구축사업 대상 국가와 대상 사업을 늘려 왔다. 특히 중국과 해양 분쟁에 있는 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비행안전이나 항공 정비, 항공기상, 해양 안전보장과 같이, 국가 안전보장을 담당하는 실무진의 능력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 국제항공법과 국제해양법 등에 대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국제법적 관심을 공유하고자 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34 防衛省,「防衛省·自衛隊による能力構築支援」,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146829.pdf(최종 검색일: 2022. 4. 25.).

〈표 3〉 일본의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능력구축사업 지원 현황[35]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동티모르	인도지원 재해구조								
				시설(공동)					
캄보디아	PKO 시설지원(단독)								
							불발탄 처리		
베트남	잠수의학(단독)				비행안전 항공의학	항공구난		잠수의학 (공동)	항공구난
		잠수의학 (공동)				사이버 시큐리티	PKO	사이버 시큐리티	
		비행안전	비행안전 (공동)	비행안전	잠수의학 (공동)	항공의학	수중불발탄 처리		
		인도지원 재해구난	국제법 항공	항공의학					
				PKO					
인도네시아	해양안전보장		국제 항공법	해양안전보장			해양 국제법	인도지원 재해구난	
					해양국제법	해양 국제법			
말레이시아				국제 항공법	인도지원 재해구난			인도지원 재해구난	
미얀마	위생					항공기상			
			시설				잠수의학		
			잠수의학			국제항공법	일본어 교육지원		
			인도지원 재해구난						
			항공기상						
라오스					인도지원 재해구난				
							불발탄제거		
필리핀				인도지원 재해구난			위생	인도지원 재해구난	
			국제법	항공정비					
						시설			
태국			인도지원 재해구난					인도지원 재해구난	
					비행안전	PKO		비행안전	
				국제 항공법					
브루네이							인도지원 재해구난 수색구난		

출처: 일본 방위성 자료를 참고로 필자 정리

防衛省, 「能力構築支援事業–実績–地域別で見る」, https://www.mod.go.jp/j/approach/exchange/cap_build/(최종 검색일: 2022. 7. 18.).

3) 해상보안청을 통한 해상 안보협력 강화

ODA와 방위성을 통한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안보협력이 여러 법제들의 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음을 앞서 기술하였다. 이는 법제 개정으로 방위성이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안보협력의 중심축을 담당하게 되었음을 의미하지만, 해상보안청을 통한 안보협력 또한 유지되었다. 해상보안청은 ODA 관련법 개정 이전 법제적 제약을 우회하여, 경비정 공여, 능력향상지원 등을 담당했었고, 법 개정 이후에도 동남아시아 국가 해경 간의 안보협력을 지원함으로써 해군 간의 충돌 위험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해 왔다.

2008년 이후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정의 위협이나 어선단의 불법 활동, 해상민병대의 활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동남아시아 국가는 해양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부담이 큰 해군보다는 해경을 통해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해상보안청의 해양 영토 분쟁 및 해양 안보에 있어서의 역할로 인해 일본의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선박과 장비 지원이 '준군사적인' 지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36] 즉, 중국이 역내 해양 영토 분쟁에 있어 준군사적인 조직체인 해경의 선박과 어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해상보안청의 역할은 중요하며, 해상보안청을 통한 안보 지원은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막는다는 점에서 일본의 새로운 안보 법제의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37]

해상보안청을 통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지원과 협력은 2010년 이전에도 지속해서 이루어져 온 것은 사실이다. 이는 말라카 해협이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다. 대표적인 지원과 협력 사례로 2000년부터 해상보안청이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와 제휴하여, 동남아시아 국

35 일본의 동남아시아 국가별 능력구축지원사업 현황을 연도와 사업별로 분류, 지속성과 빈도, 내용을 정리하였다. 진행되는 사업의 수(빈도)가 많을수록, 진행되는 기간이 길수록 일본으로부터의 지원이 많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업의 내용을 통해 군사능력향상과의 연계성을 추측할 수 있다.

36 Alexandra Sakaki & Sebastian Maslow, "Japan's New Arms Export Policies: Strategic Aspirations and Domestic Constraints,"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74(6), 2020, p. 657.

37 Raymond Yamamoto, "The Securitization of Japan's ODA: New Strategies in Changing Regional and Domestic Contexts."

가에 해상구조, 해양환경보전, 기름 방제, 항행 안전, 교육 훈련 등의 인재 육성 지원을 지속해서 실시해 온 사실을 들 수 있다. 해경의 능력향상지원과 재난 구호 영역에 치우쳐져 있던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해상보안청의 지원 사업은 2010년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의 해상보안기구 창설과 운영에 기여함으로써 안보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 말레이시아는 2011년, 베트남은 2013년, 인도네시아는 2014년에 설립된 해상보안기구들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대대적인 지원을 이끌어 냈다.[38]

해상보안청은 방위성과 마찬가지로 동남아지역에서의 합동 초계 활동과 연합훈련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안보협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해상보안청은 공해상의 해적 및 불법 활동 단속을 위해 매년 동남아시아 주변 해역에 순시선을 파견하여 합동 초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합훈련은 일본·필리핀·인도네시아 합동 해양오염 방재 훈련(Marine Pollution Exercise)인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들이 참가하기도 한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와의 연합훈련은 기항지 방문 시 각기 다른 형태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러시아나 인도 등과 하는 정규 연합훈련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매년 동남아시아 지역에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함을 파견, 이들 국가와의 해상안보 분야의 협력 관계를 다지고 있다.[39]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안보협력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분야는 '해상에서의 국제해양법의 집행'의 교육 및 훈련이다. 일본은 일관되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을 목표로 '법의 지배에 기반한 해양 질서의 유지 강화'를 천명해 왔으며, 동남아시아 국가의 해상보안

38 海上保安庁,「海上保安レポート2018」, https://www.kaiho.mlit.go.jp/info/books/report2018/html/honpen/8_03_chap2.html(최종 검색일: 2022. 4. 25.).

39 秋本茂雄,「インド太平洋における海上保安分野の連携·協力·支援」, 日本国際問題研究所, 2019, 51~62쪽. https://www.jiia.or.jp/pdf/research/R01_BottomUpReview/BottomUpReview-sec04.pdf(최종 검색일: 2022. 4. 25.).

능력 향상에 교육과 훈련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은 공통의 가치관으로서의 '법의 지배'를 '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 및 '공동해상법 집행 프로세스 확립'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40]

동남아시아 지역의 해역은 중국의 부상 이후 중국과 주변국과의 상충하는 영해권 주장으로 인해 해경 간의 충돌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해적, 테러, 밀항, 밀수 등과 같은 비전통적 분야에서의 안보 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동시에 동남아시아 각국은 해상보안기구의 능력에 있어서 중국과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제해권 행사의 불균형적 요소를 시정하기 위해, 일본은 해상보안청을 창구로 동남아시아 각국의 해상보안기구와 안보협력을 강화해 온 것이다. 요컨대, 동남아시아 국가의 해상보안기관에 대한 일본의 각종 지원은 해상안보 분야에서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비전통 분야에서의 안보협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5. 연합훈련: 다자 및 양자 군사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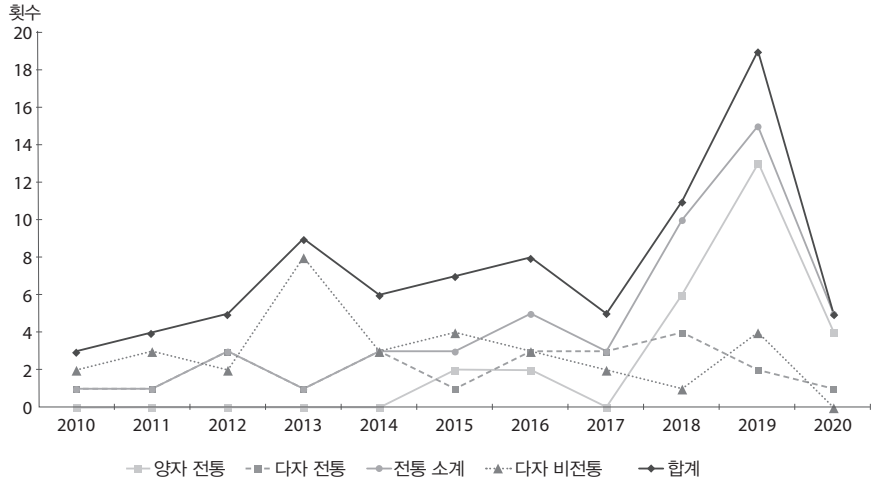
국가 간 안보협력이 어느 정도 제도화되고 정례화되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 중의 하나는 연합훈련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연합훈련의 빈도와 내용은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안보 정책의 현황 및 성격을 알 수 있게 한다. 우선 연합훈련의 빈도 면에서 볼 때,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안보협력이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시점에는 많지 않았던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양국 간·다국 간 연합훈련은, 2018년 이후 양적으로 늘어났으며 동시에 공동 훈련을 하는 분야도 의료, 재난, 재해 대비 등으로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40 秋本茂雄,「インド太平洋における海上保安分野の連携·協力·支援」, 58~59쪽.

일본의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연합훈련 참여 유형은 (1) 전통적인 다자 안보 연합훈련에 일본 참여, (2) 비전통적 안보협력을 위한 다자 연합훈련에 일본 참여, (3) 양자 연합훈련으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다자 연합훈련에 일본이 참여하는 유형의 대표적인 것으로 코브라 골드 훈련을 들 수 있다. 이 훈련은 2006년에 미국과 태국의 양자 훈련으로 시작되었지만, 동아시아 국가가 대규모로 참가함에 따라 아시아 최대 규모의 다국간 연합훈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일본은 2010년 이후 지속해서 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필리핀과는 '바리가탄', '커맨더그라'는 연합훈련을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는 '코모도'라는 연합훈련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이후 일본은 미국과의 양자 훈련에서 확대된 다자 군사 훈련에 참여하는 빈도수를 늘리고 있다.

일본이 참여하는 비전통적 안보협력을 위한 다자 연합훈련으로서 대표적인 것으로 퍼시픽 파트너십을 들 수 있다. 이 훈련은 미국 주도의 다국 간 연합훈련으로서 의료활동, 문화교류 등을 통해 참가국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 재난구호 활동을 원만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퍼시픽 파트너십에 대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참여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가국 대부분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감안할 때, 사회주의 국가이자 중국과 영해 분쟁 중인 베트남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는 주목할 만하다.

비전통적 안보협력 분야에서의 연합훈련으로 서태평양 소해(掃海) 연습, ARF 재해 구난 실무연습 등은 동남아시아가 주도로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주요 참가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나 연합훈련이 일어나는 장소와 주도국, 참가국이 연도별로 유동적이다. 상기 훈련은 다자 훈련명에서 드러나듯이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캡스톤 연습은 미국을 비롯한 평균 30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가하는 다자 연합훈련이라는 점에서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성을 넘어서고 있지만, 매번 5개국 이상의 동남아시아 국가가 참가하고 있고 훈련 장소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다자 연합훈련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훈련의 목적 역시 전통적인 군사 안보 훈련



〈그림 1〉 일본 · 동남아시아 국가의 연합훈련 현황

출처: 방위백서 자료를 참고로 필자 정리
防衛省, 『防衛白書2021 資料編』, 2022, 80~83쪽, 99~100쪽.
防衛省, 『防衛白書2018』, 2019, 499~501쪽.
防衛省, 『防衛白書2015 資料59,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15/html/ns059000.html(최종 검색일: 2022. 7. 18.).
防衛省, 『防衛白書2012 資料57,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13/2013/datindex.html(최종 검색일: 2022. 7. 18.).

이라기보다는 국제평화 유지 활동 능력 제고라는 비전통적 분야의 안보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양국 간 군사 훈련은 2015년 일본과 필리핀 간의 훈련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2015년 이후 일본은 필리핀과 총 10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각각 4회, 베트남, 브루나이와 각각 2회, 태국과 1회 양국 간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중국과의 영해 분쟁이 있는 국가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의 연합훈련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사회주의 국가인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는 일본과 양자 간 연합훈련을 하지 않는 데 반해 베트남은 일본과의 양자 간 연합훈련만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다자 연합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연합훈련의 빈도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내용 면에서도 전통적인 군사 안보 훈련과 비전통적 군사 안보 훈련이 혼재되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이전

에는 2012년을 제외하고 다자가 참여하는 비전통적 군사 안보 훈련의 참여 빈도가 높았으며, 이 시기 일본이 참가한 전통적 군사 안보 훈련의 경우 미국 주도의 다자 연합훈련이었다. 그러나 2016년 이후에는 전통적 의미의 군사 안보 훈련이 다자 간·양자 간 모두 다양하게 또 자주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증가 경향을 보이던 군사 안보 훈련이 2020년에 급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면 접촉을 동반하는 국가 간 방위 교류 및 외교 교류 전반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동남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타 지역과의 방위 및 외교 교류가 급감했음을 고려해 볼 때, 2020년은 방위 교류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된다. 요컨대, 연합훈련의 내용적 측면과 빈도를 고려해 볼 때, 일본은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비전통적인 분야의 안보 훈련에 지속해서 참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분야인 군사 안보 훈련의 경우, 대상 국가 수를 늘리고 그 협력의 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즉 비전통적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비군사주의적 전통의 유지와 군사 안보협력 강화라는 방향성이 동시에 관찰되고 있다.

6. 마치며

2010년 이후 강화된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으로 인해, 일본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분쟁 관계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2012년 12월 2차 아베 정부 출범과 더불어 명기된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국가안전보장 전략에 근거해, 2차 아베 내각은 동남아시아 국가와 '자유롭고 개방된 항행의 자유'의 원칙과 '국제법에 의한 분쟁 해결' 원칙을 강조하며 상호 협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밝혔으며, 이 원칙에 근거해 해양 안보 분야에서의 지원을 이어 나갔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해양 안보 지원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방위협력대강 및 개발협력대강 등 방위산업의 해외 수출과 지원을 막아 오던 법제 개

❶ 2013년 7월 25일 일본 말레이시아 정상회담
(좌: 나집 총리, 우:아베 총리)

❷ 2013년 7월 26일 일본 싱가포르 정상회담
(좌: 아베 총리, 우: 리센룽 총리)

❸ 2013년 7월 27일 일본 필리핀 정상회담
(좌: 아베 총리, 우: 아키노 대통령)

〈그림 2〉 아베 총리대신의 말레이시아·싱가포르·필리핀 방문

출처: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安倍総理大臣のマレーシア，シンガポール及びフィリピン訪問」
(https://www.mofa.go.jp/mofaj/kaidan/page3_000319.html)

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 개정을 통해 방위협력을 위해 필요할 방위예산 증가를 크게 동반하지 않으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본의 군사력 확대라는 이미지를 주지 않는 안보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일본의 비군사주의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법제 개정을 통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방위 물품 지원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비군사주의 전통으로부터의 이탈로 해석될 수 있으나, ODA와 해상보안청을 통한 우회 지원이라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방위비 GNP 1% 이내의 원칙'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비군사주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두 개의 비엔티안 선언과 방위성의 능력구축사업 및 해상보안청을 통한 해상 안보 지원 강화를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비군사주의적인 전통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일본은 비엔티안 선언을 통해 동남아시아 중심주의를 천명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다자주의적 협력

해 나갈 것을 공표하였다. 또한, 방위성의 능력구축사업과 해상보안청의 능력향상지원사업을 통해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위성 및 해상보안청 차원의 동남아 국가에 대한 지원은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과 해양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내걸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협력 국가의 군사적 역량 강화와 연결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10년 이후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연합훈련 역시 일본의 비군사주의 전통과 그 전통에서 이탈의 경향성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우선 군사 연합훈련의 빈도와 참가국의 추이를 고려해 볼 때, 일본은 동남아시아 국가와 전통적 의미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통적 분야의 안보협력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비전통적 안보 훈련을 위한 새로운 시도에 일본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할 점이다.

본고는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일본의 안보협력 강화는 비군사주의 규범의 계승과 이탈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전통적 안보의 중요한 기준인 연합훈련의 내용과 빈도라는 측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전통적인 군사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향후 일본은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안보협력을 전개함에 있어서 비전통적인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비군사주의'적인 접근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의미의 군사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팽창하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보다는 '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해 우회적으로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로 분석할 수 있다. 요컨대 향후 일본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특히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 상황에 처한 국가와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그 밖의 동남아시아 국가와는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투고일자: 2022. 5. 31. | 심사완료일자: 2022. 6. 24. | 게재확정일자: 2022. 7. 18.

治学』 23巻, 1972.
三谷太一郎, 『近代日本の戦争と政治』, 岩波書店, 1997.

일본 부흥 내셔널리즘을 넘어서: 포스트 3·11 재난문학의 행방 | 배관문

구정호 옮김, 『만요슈: 고대 일본을 읽는 백과사전』, 살림, 2005.
오찬욱 옮김, 『헤이케 이야기』 1, 문학과지성사, 2006.
남상욱, 「디스토피아의 언어세계: 다와다 요코의 「불사의 섬」과 「헌등사」를 중심으로」, 『比較文化研究』 제51집, 2018.
배관문,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 된 후쿠시마: 현대일본 표상문화론에서 서발턴 연구의 가능성」, 『일본연구』 91권, 2022.
심정명, 「재난과의 거리: 『내가 없었던 거리에서』와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일본문학」, 『일본공간』 27권, 2020.
심정명, 「문학적 상상을 통한 재난 경험의 확장: 고바야시 에리카 『트리니티, 트리니티, 트리니티』와 방사능의 기억」, 『일본학보』 제129권, 2021.
정형 외, 『일본문학 속 에도·도쿄 표상연구』, 제이앤씨, 2009.
최가형, 「일본사회의 부흥 내셔널리즘과 부상(浮上)하는 일본어의 힘」, 『亞細亞研究』 60권 4호, 2017.
후쿠시마 료타, 안지영 외 옮김, 『부흥 문화론: 일본적 창조의 계보』, 리시올, 2020.
川村湊, 『震災·原発文学論』, インパクト出版会, 2013.
木村朗子, 『震災後文学論: あたらしい日本文学のために』, 青土社, 2013.
木村朗子, 『その後の震災後文学論』, 青土社, 2018.
黒古一夫, 『原発文学史·論: 絶望的な「核(原発)」状況に抗して』, 社会評論社, 2018.
限界研 他 編, 『東日本大震災後文学論』, 南雲堂, 2017.
神野志隆光, 『複数の「古代」』, 講談社, 2007.
品田悦一, 『万葉集の発明』, 新曜社, 2001.
兵藤裕己, 『太平記〈よみ〉の可能性』, 講談社, 2005.
山本七平, 『現人神の創造者たち』, 筑摩書房, 2007.
若尾政希, 『「太平記よみ」の時代』, 平凡社, 2012.
「非現実的な夢想家として」, https://apjjf.org/2011/9/29/Murakami-Haruki/3571/article.html(최종검색일: 2022. 7. 10.).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중일경쟁과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안보정책 변화 | 이승희·김지영

강우철, 「일본ODA의 국제규범 준수와 공여국 중심주의: 개발협력대강을 중심으로」, 『한림일본학』 30권, 2017.
김석수,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남아시아의 역할」, 『동북아연구』 제34권 제1호(통권 48호), 2019.
김진기, 「일본의 무기수출정책 변화: 전개과정, 배경, 의도」, 『국가전략』 제20권 제3호(통권 69호), 2014.

박영준,「군사력 관련 규범의 변화와 일본 안보정책 전망: “기반적 방위력”개념, “우주의 평화적 이용 원칙” 및 “무기수출 3원칙”개정을 중심으로」,『한일군사문화연구』통권 14호, 2012.

박영준,「일본 방위산업 성장과 비군사화 규범들의 변화: ‘무기수출금지3원칙’의 형성과 폐지 과정을 중심으로」,『한일군사문화연구』18호, 2014.

배기현,「일본과 중국의 대(對) 동남아시아 협력: 경쟁과 수렴」,『신아세아』제24권 제2호(통권 91호), 2017.

서승원,「한국과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안보정책: 신남방정책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 그리고 역외 중간국의 전략적 영향력」,『비교일본학』48집, 2020.

이기태,「일본의 대동남아시아 능력구축지원과 해양 안보」.『E-JOURNAL』제10호(4월), 2016, http://komsf.or.kr/bbs/board.php?bo_table=m43&wr_id=30(최종 검색일: 2022. 4. 25.).

이기태,「일본의 대베트남 안보협력: 소프트 안보협력」,『일본학보』122호, 2020쪽.

이기태,「협력과 충돌의 대외전략: 일본의 아시아 외교를 중심으로」,『일본연구논총』44권, 2016.

이지영,「일본의 대ASEAN 전략의 변화」,『21세기정치학회보』28권 4호, 201.

이진영·김태균,「동남아시아 체제전환국가의 대외원조 활용 전략 비교연구: 베트남과 미얀마 사례를 중심으로」,『국제지역연구』제28권 제4호, 2019.

허원영,「전후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경제협력과 문화외교: ‘경제지배’ 이미지의 대응 수단으로서의 소프트 파워」,『日本學(일본학)』통권 54호, 2021.

秋本茂雄,「インド太平洋における海上保安分野の連携·協力·支援」,『安全保障政策のボトムアップレビュー』, 日本国際問題研究所, 2019, https://www.jiia.or.jp/pdf/research/R01_BottomUpReview/BottomUpReview-sec04.pdf(최종 검색일: 2022. 4. 25.).

神谷万丈,「「競争戦略」のための「協力戦略」: 日本の「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戦略(構想)の複合的構造」,『安全保障研究』第1巻 2号, 2019.

木場紗綾,「米中の間で揺れる東南アジアの外交と日本の関与」,『社会科学』48(4), 2019.

経済産業省,「防衛装備の海外移転の許可の状況 に関する年次報告書」, 2022, https://www.meti.go.jp/policy/anpo/set_annualreport_220408.pdf(최종 검색일: 2022. 4. 25.).

齋藤康平,「中国の海洋進出と我が国の対応について」,『アジア研究』60巻 4号, 2015.

神保謙,「「インド太平洋」構想の射程と課題」, 国際安全保障学会[編],『国際安全保障』, 46(3), 2018.

首相官邸,「「防衛装備品等の海外移転に関する基準」についての内閣官房長官談話」, 2011, http://www.kantei.go.jp/jp/tyokan/noda/20111227DANWA.pdf(최종 검색일: 2022. 4. 25.).

『中日新聞』,「越, 沿岸警備隊に格上げ改編 日本の巡視船供与に道」, 2013年8月28日.

林賢參,「安倍政権の東南アジア外交とインド太平洋戦略(特集 日本の政治経済情勢)」,『問題と研究: アジア太平洋研究専門誌』47(2), 2018.

防衛省,『防衛白書2019』~『防衛白書2021』, https://www.mod.go.jp/j/publication/wp/(최종 검색일: 2022. 4. 25.~7. 18.).

防衛省,『防衛白書2015』, 資料59,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15/html/ns059000.html(최종 검색일: 2022. 7. 18.),

防衛装備庁,「防衛装備移転三原則の運用指針」, 2022, https://www.mod.go.jp/atla/soubiseisaku/soubiseisakugijutu/itenshishin_r040308.pdf(최종 검색일: 2022. 4. 25.).

防衛省,『防衛白書2012』, 資料57,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13/2013/datindex.html(최종 검색일: 2022. 7. 18.).

防衛省,「防衛省·自衛隊による能力構築支援」,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146829.pdf(최종 검색일: 2022. 4. 25.).

防衛省,「能力構築支援事業-実績-地域別で見る」, https://www.mod.go.jp/j/approach/exchange/cap_build/(최종 검색일: 2022. 7. 18.).

外務省,「TC－90等のフィリピンへの移転」, https://www.mofa.go.jp/mofaj/s_sa/sea2/ph/page3_001796.html(최종 검색일: 2022. 4. 25.).

外務省,「日·ベトナム防衛装備品・技術移転協定の署名」, 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3_000584.html(최종 검색일: 2022. 7. 18.).

外務省,「日·タイ共同記者発表」, https://www.mofa.go.jp/mofaj/s_sa/sea1/th/page3_003296.html (최종 검색일: 2022. 7. 18.).

衆議院 ,「衆議院議員井坂信彦君提出開発協力大綱に関する質問に対する答弁書」,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b189093.htm(최종 검색일: 2022. 4. 25.).

海上保安庁 ,「海上保安レポート2018」, https://www.kaiho.mlit.go.jp/info/books/report2018/html/honpen/8_03_chap2.html(최종 검색일: 2022. 4. 25.).

吉岡桂子,「米中対立が揺らすASEANの「天秤」: アジアは今, 何を考えているのか」, 外交編集委員会編,『外交』59(3), 2020.

Berger, Thomas U., "From Sword to Chrysanthemum: Japan's Culture of Anti-militarism," *International Security* 17(4), 1993, 119~150.

Sakaki, Alexandra & Sebastian Maslow, "Japan's New Arms Export Policies: Strategic Aspirations and Ddomestic Constraints,"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74(6), 2020.

Sinkkonen, Elina, "The More the Merrier? Sino-Japanese Security Relations in the Context of Complex Interstate Rivalry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Pacific Review* 32(5), 2019.

Yamamoto, Raymond, "The Securitization of Japan's ODA: New Strategies in Changing Regional and Domestic Contexts," in Marie Söderberg& André Asplund, eds., *Japanese Development Cooperation: The Making of an Aid Architecture Pivoting to Asi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6.

Yamamoto, Raymond, "The Trajectory of ODA's Strategic Use and Reforms: From Nakasone Yasuhiro to Abe Shinzō,"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74(6), 2020, 633~648.

의 '근대'를 생각할 때의 기준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용희의 사유는 본인의 말대로 늘 '현대 속의 근대'를 살았다. 이는 그의 언설이 결코 '근대'로만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용희에게 '탈근대'의 맥락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울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그가 근대의 '모순'을 무엇으로 보았는지 이용희의 정치학이 지닌 '분노'의 원점으로 돌아가 확인한 후, 그것이 냉전 초기 '다민족주의 국가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탈냉전기 유럽의 지역통합을 놓고 논의된 '연방론'에 어떻게 연계되는지, E. H. 카를 시작으로 칼 슈미트로 이어지는 사상적 맥락과 함께 해명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근대의 밑바닥—식민지—에서 시작한 이용희의 국제정치학이 '제왕'의 학문으로서 도달한 지점이 어떻게 '한국적' 역사성을 지녔는지 고찰했다.

주제어: 근대, 탈근대, 국제정치학, 민족주의, 지역주의, 식민지조선, 이용희, E. H. 카, 칼 슈미트.

일본 부흥 내셔널리즘을 넘어서: 포스트 3·11 재난문학의 행방 | 배관문

본고에서는 주로 후쿠시마 료타의 『부흥 문화론: 일본적 창조의 계보』의 분석을 검증하면서 '재해-부흥'과 관련한 일본의 사상과 미학을 재고했다. 그의 부흥 문화론은 종래 전통적인 문학과 사상사의 통념을 뒤집는다는 점에서 분명 신선하게 읽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논점은 결국 2020 도쿄올림픽의 '부흥' 논리와 유사해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재해-부흥'으로 어느 정도 일관되게 읽을 수 있는 일본문화론의 중요성이나 의의를 전면 부정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필자는 그러한 관점이 동일본대지진 이후 '진재문학' 혹은 '재난문학'이라는 용어로 적극 이야기되며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그에 동조하는 입장에 서 있다. 다만 양쪽의 부흥 담론에서 놓치고 있는 지점, 즉 '일본' 부흥 문화론이 '지방'과 '지역'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2020 도쿄올림픽이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부흥을 제창했던 시기부터 도쿄에서 열리는 행사가 지방인 후쿠시마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애초부터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마찬가지로 후쿠시마의 부흥 담론이 국가적인 전통과 역사, 내셔널리즘에 함몰되어 '지방'과 '지역'을 경시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은 것이다. 더불어 후쿠시마가 인용한 고전 작품들에서는 국가적인 부흥이 아니라 '지방'과 '지역'의 부흥에 관해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는지 조사했다. 왜냐하면 근대 국가가 출현하기 이전에 발생한 고전 문학에서는 오늘날과는 다른 관점에서 '재해'와 '부흥'을 설명해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주제어: 재난문학, 부흥, 후쿠시마 료타, 지방,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중일경쟁과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안보정책 변화 | 이승희·김지영

본 논문은 일본의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된 2010년 이후의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안보협력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일본의 주요한 대외전략인 대중국 견제가 동남아시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일본의 안보법제 개정과 현저해진 타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두고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이 비군사주의 규범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안보협력 사례연구를 통해, 비전통적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비군사주의의 전통과, 이러한 전통에서 탈피하려는 방향성이 중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안보법제 개정과 직접적인 방위 물품 지원, 군사 연합훈련 증가 등의 현황은 일본이 전후 지속해온 비군사주의 규범에서 이탈해 동남아시아 국가와 적극적인 안보협력을 추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 개정 뒤에도 지속되고 있는 ODA와 해상보안청을 통한 방위 물품의 우회 지원이라는 방식, 두 개의 비엔티안 선언, 방위성의 능력구축 사업, 해상보안청을 통한 해상안보협력을 확대라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면서,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하는 비군사주의적인 전통을 유지하려는 일본의 전략적 의지를 투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 비전통적인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비군사주의'적인 접근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의미의 군사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즉 일본의 대외정책의 방향성은 팽창하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라기보다는 '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한 우회적인 견제가 주를 이룰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주제어: 중일관계, 비군사주의, 동남아시아, 일본 안보 정책, 일본 외교

Sino-Japanese Rivalry in Southeast Asia and Changes in Japan's Security Policy toward Southeast Asian Countries | LEE Seunghee & KIM Ji Young

This paper explores how Japan's strategy of checking against China would develop in Southeast Asia by examining the process of Japan's security cooperation with ASEAN after 2010 when Japan's balancing effort against China was in full swing. Previous studies on the revision of Japan's security legislation and the marked strengthening of security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interpret it as a full-fledged departure from Japan's demilitarization norms. Through analyzing the process of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ASEAN countries, this paper, however, argues that the culture of demilitarization still exists in Japan's security strategy which puts an emphasis on non-traditional security cooperation, along with the direction to break away from this tradition in layers.

Japan's policies of the revision of the security legislation, direct support for defense supplies, and increase in military joint training show that Japan is pursuing active security cooperation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by breaking away from the demilitarization norms that have continued since the end of the war. Nevertheless, the measures of supporting defense products through ODA and Japan's Coast Guard, which has continued even after the revision of the law; the two Vientiane Declarations, the Defense's capacity building project, and the expansion of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through Japan's Coast Guard are maintained. This reflects Japan's strategic will to preserve the demilitarization tradition of emphasizing cooperation in non-traditional security fields, without directly provoking China. Therefore, Japan is expected to maintain the approach of upholding the demilitarization norm in security cooperation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while strengthening military cooperation in the traditional sense. In summary,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direction of Japan's foreign policy will be mainly about indirect checks through a multilateralism approach rather than a direct check against growing China.

• **Keywords**: Sino-Japanese relations, demilitarization norm, Southeast Asia, Japan's security policy, Japan's foreign policy.